

## 경기도교육청 행정 실패의 원인-결과-피해

**원인:** 정원 산출 오류, 부서 간 협의 부재, 알고리즘 검증 실패, 평준화 취지 훼손, 사후 대응 실패

**결과:** 구조적 미달, 특정 학교 쏠림, 배정 오류 반복, 교육청 신뢰도 하락

**피해:** 진성고: 학생 수 부족 → 교육과정 축소 → 학교 이미지 하락 → 존폐 위기

**신입생:** 원치 않는 배정, 불안정한 교육 환경, 학습권 침해

구분	행정 실패의 원인 (교육청이 잘못된 점)	그로 인한 결과 (행정적·제도적 문제)	진성고 및 신입생 피해
<b>정원 산출 실패</b>	학생 수 감소(-300명)를 반영하지 않고 정원을 과다 산출함. 진성고만 정원을 줄이고 다른 학교는 늘림.	전체 정원이 실제 학생 수보다 150~200명 많아 구조적 미달 발생. 특정 학교로 미달 집중.	진성고 배정 인원 225명 중 실제 배정 90명. 정상 교육과정 운영 불가. 학급 축소·과목 축소 위험.
<b>부서 간 협의 부재</b>	정원 산출(학교설립과)과 배정(중등교육과)을 서로 협의 없이 따로 진행.	정원·배정 불일치. 오류 발생 시 책임 회피. 사전 검증 부재.	잘못된 배정 결과가 그대로 발표되어 학생·학부모가 직접 피해를 떠안음.
<b>배정 알고리즘 검증 실패</b>	작년 총현고 미달 사태 이후에도 알고리즘 개선·검증 미 실시. 사전 시뮬레이션 없음.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고도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 교복집이 먼저 알 정도로 사전 검토 부재.	진성고만 반복적으로 미달 발생. 신입생은 원치 않는 배정 결과를 감당해야 함.
<b>평준화 취지 훼손</b>	선호도 높은 학교 정원 확대, 선호도 낮은 학교 정원 축소라는 모순적 정책 유지.	평준화 지역에서 학교 간 격차 심화. 지망 왜곡(정원이 많은 학교로 쏠림).	진성고는 구조적으로 9지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짐. 학교 이미지 하락.
<b>문제 인지 후 조치 미흡</b>	작년 미달 사태를 알고도 정원 조정·배정 방식 개선을 하지 않음.	동일 문제 재발. 학부모 민원 증가. 교육청 신뢰도 하락.	진성고는 2년 연속 미달로 학교 존폐 위기. 신입생은 불안정한 교육 환경에 놓임.
<b>사후 대응 실패</b>	재배정·정원 재산정 등 실질적 해결책 거부. "전학생을 진성고로만 배치"라는 왜곡된 대책 제시.	문제 해결이 아닌 '또 다른 희생자 만들기'식 대응. 갈등 장기화.	신입생은 불공정한 배정 결과를 그대로 감당. 학교는 추가 전입생만 떠안아 교육질 저하 우려.
<b>학교 보호 조치 부재</b>	미달 학교에 대한 지원·이미지 회복 조치 없음. 최소 운영 인원 보장 정책 부재.	학교 경쟁력 약화. 지역 내 학교 간 격차 심화.	진성고는 교육과정 축소, 교사 감축, 학교 이미지 실추 등 직접적 피해 발생.

# 경기도교육청 행정 실패 원인-사전 조치-발생하지 않았을 상황

필요한 사전 조치: 정원 산출-배정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

평준화 취지에 맞는 정원·배정 정책 재설계

사전 예측·사후 대응 체계의 제도화

예방 할 수 있는 상황: 진성고 90명 배정 사태는 발생하지 않음.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신입생들은 학습권·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음.

행정 실패 원인	교육청이 사전에 취했어야 할 조치	그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
<b>정원 산출 실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졸업생 수 기반의 정원 산출 공식 재정립</li> <li>- 정원 상·하한 설정으로 학교 간 편차 최소화</li> <li>- 학생 수 감소 자동 반영 시스템 도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정원이 실제 학생 수와 일치</li> <li>- 구조적 미달 사라짐</li> <li>- 진성고 90명 배정 사태 미발생</li> </ul>
<b>부서 간 협의 부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설립과·중등교육과 공동 검토 체계 구축</li> <li>- 정원 산출-배정 프로세스 통합 관리</li> <li>- 사전 검토 회의 의무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원·배정 불일치 사전 차단</li> <li>- 오류 조기 발견·수정</li> <li>- 배정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li> </ul>
<b>배정 알고리즘 검증 실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정 알고리즘 전면 재검토 및 개선</li> <li>- 배정 전 시뮬레이션·오류 검증 절차 도입</li> <li>- 알고리즘 기준·가중치 공개 및 외부 검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왜곡 배정 사전 발견</li> <li>- 지망 왜곡 방지</li> <li>- 학부모 불신·갈등 최소화</li> </ul>
<b>평준화 취지 훼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호도 기반 정원 조정 금지</li> <li>- 평준화 원칙에 맞는 균등 정원 배분 유지</li> <li>- 지망 구조 개선(정원·거리·선호도 균형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학교 쏠림 완화</li> <li>- 학교 간 격차 축소</li> <li>- 진성고가 구조적으로 9지망이 되는 현상 사라짐</li> </ul>
<b>문제 인지 후 조치 미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총현고, 진성고 미달 사태 분석 및 즉각 개선</li> <li>- 정원·배정 방식 보완 후 다음 해 적용</li> <li>- 위험 징후 발견 시 즉시 정원 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문제 반복되지 않음</li> <li>- 진성고 미달 재발 방지</li> <li>- 지역 전체 배정 안정화</li> </ul>
<b>사후 대응 실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발생 시 재배정·정원 재산정 등 실질적 조치 시행</li> <li>- 전학생 강제 배치 같은 임시방편 금지</li> <li>- 학부모·학교와의 공식 협의체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학교 피해 최소화</li> <li>- 갈등 조기 해결</li> <li>- 학교 존폐 위기 미발생</li> </ul>
<b>학교 보호 조치 부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 학교 대상 지원·홍보·정원 보정 정책 시행</li> <li>- 최소 운영 가능 인원 기준 설정 및 보장</li> <li>- 학교 이미지 회복 프로그램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이미지 유지</li> <li>- 지망 기피 악순환 차단</li> <li>- 진성고 정상 교육과정 운영 가능</li> </ul>

## 경기도교육청의 진성고 배정에 대한 위법성

**학습권·평등권 침해 → 헌법·행정절차법·국가배상법 모두 위반**

분야	예상 결과
법적	처분 취소, 위법 확인, 절차상 하자 인정
행정적	감사·징계·문책, 조직 개편
재정적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정책적	정원 산출·배정 시스템 전면 개편
정치적	교육감 책임론·사퇴 요구 증가
사회적	교육청 신뢰도 하락, 지역사회 반발 확대

행정 실패 원인	위법성	위법성 근거
정원 산출 실패	정원 산출의 위법성	→ 학생 수 감소 반영 실패 + 특정 학교만 정원 축소 학생 수 감소(-300명)를 반영하지 않고 정원을 과다 산출 특정 학교(진성고)만 정원 축소, 다른 학교는 확대 이는 평등원칙 위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부서 간 협의 부재	절차적 위법	→ 부서 간 협의 부재 정원 산출 부서와 배정 부서가 협의 없이 따로 진행 행정절차법상 절차 준수 의무 위반
배정 알고리즘 검증 실패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 사전 검증 부재 사전 시뮬레이션·오류 검증 절차 없음 교복집이 먼저 알았다는 사실은 사전 검토 의무 위반을 강하게 시사
평준화 취지 훼손	평준화 취지 훼손	→ 정원 편차 확대 선호도 높은 학교 정원 확대 → 쏠림 심화 평준화 지역에서 정원 편차 확대는 명백한 정책 이탈
문제 인지 후 조치 미흡	반복된 문제 방치	→ 작년 충현고, 진성고 사태 이미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음 이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조치하지 않은 과실
사후 대응 실패	사후 대응의 부적절성	→ 재배정 거부 + 전학생 강제 배치(이마저도 불이행) 재배정 거부 "전학생을 진성고로만 배치"라는 임시방편(실행 안 함) 이는 문제 해결 의무 불이행
학교 보호 조치 부재	학교 보호 조치 부재	미달 학교에 대한 지원·홍보·정원 보정 없음 학교 운영 정상화 의무 위반

# 경기도교육청의 진성고 배정에 대한 위법성의 법적 근거

## 1. 행정절차법 위반

**제4조(신뢰보호의 원칙)** : 행정청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정원·배정 시스템을 신뢰하고 지망을 작성했음.
- 정원 산출 오류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제7조(공정한 절차)** :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

- 정원 산출·배정 과정이 불투명했고, 기준도 공개되지 않음.

**제21조(사전 통지)** : 중요한 불이익 처분은 사전 통지해야 함.

- 진성고가 90명만 배정될 가능성은 사전에 예측 가능했음에도 통지 없음.

**제27조(의견 제출)** :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기회를 보장해야 함.

-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 없음.

## 2. 국가배상법 위반

**제2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 공무원이 직무상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함. 이번 사안에서의 과실은 명백함:

- 정원 산출 오류
- 배정 알고리즘 검증 부재
- 작년 문제 방치
- 사후 대응 실패

### 손해 인정 가능성

- 학습권 침해
- 교육기회 상실
- 학교 이미지 훼손
- 사교육비 증가
- 전학·통학 비용 증가

## 3. 헌법적 근거

**헌법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 학생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특정 학교만 구조적으로 미달되도록 만든 것은 교육기회 침해.

**헌법 제11조(평등권)**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진성고만 정원을 줄이고 다른 학교는 늘린 것은 차별적 행정.